- □ 일시: 2022년 8월 11일 (목) 오후 2시
- □ 장소: 산림비전센터 열림홀
- □ 주최: 한반도선진화재단, 안민정책포럼,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자유기업원

- □ 발표: 박명호 안민정책포럼 회장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의장 제성호 중앙대학교 교수
- □ 토론: 이성구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이사장 김성준 경북대학교 교수 강영환 대전도시전략연구원 원장 김영우 전 국회의원

윤석열 권력 100일의 평가와 대안

박명호 안민정책포럼 회장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석열 권력100일의 평가와 대안

박 명 호 (동국대학교)



20대 대선 득표율 단위: %



윤석열 국민의힘 47.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4** 심상정

정의당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수위&용산

- 3/10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당선 (48.6%, 역대 최소 표차)
- 3/17 윤석열 당선인.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 무산
- 3/20 대통령 집무실 이전 기자회견
- 3/21 문재인 대통령, 안보 공백, 일정 무리 표명
- 3/28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과 청와대 만찬 회동
- 4/6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360억 국무회의 의결



취임&지방선거

- 5/10 윤석열 대통령 취임
- 5/16 윤석열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
- 5/18 尹·국민의힘 당정 100여 명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 5/21 한미정상회담
- 6/1 제8회 지방선거(투표율 50.9%) 광역단체장 선거 12 곳 여당 후보 당선
- 6/2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도부 총사퇴







총수청문보고서
채택청문보고서
미채택청문회 없이 임명사퇴23명9명10명2명4명

인선

- 3/13 尹,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안철수·부위원장 권영세·기획위원장 원희룡 등 인선 발표
- 4/3 신임 국무총리 한덕수 지명
- 4/10 국토부 원희룡 등 새 정부 8개 부처 장관 후보 발표
- 4/13 법무부 한동훈 등 추가 인선안 발표
- 5/23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 사퇴
- 5/26 복지·교육부 장관, 식약처장 인선
- 7/4 복지부장관 후보 김승희 자진 사퇴 / 윤석열 대통령, 교육부장관 박순애 임명





경찰국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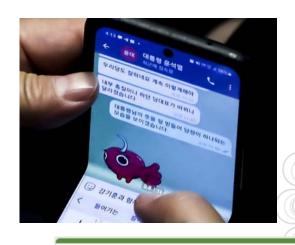
- 6/10 경찰제도개선자문위,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권고
- 6/21 행안부, 경찰국 신설 추진
- 7/15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안 최종안 발표
- 7/23 류삼영 총경, 전국 경찰서장 회의 진행
- 7/23 경찰청,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 7/25 이상민, "경찰서장회의, 쿠데타 준하는 상황 대단히 부적절" 발언
- 7/26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





월북 VS 강제북송

- 6/16 국가안보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결론 번복
- 6/17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착수
- 7/6 국정원,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박지원·서훈 고발
- 7/11 통일부, 북송 사건 관련 결론 번복
- 7/12 통일부, 북송 당시 현장 사진 공개
- 7/13 대통령실, 북송 사건 관련 입장 발표
- 7/18 통일부, 북송 당시 현장 동영상 공개
- 7/25 국방부, 북송 당시 유엔군사령부 승인 사실 인정
- 7/27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종료





- 7/8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대표 당원권 정지 6 개월 결정
- 7/11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대표 직무대행' 체제 추인
- 7/26 권성동 텔레그램 논란
- 7/29 배현진 최고위원 사퇴
- 7/31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 사퇴&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사퇴
- 8/4 국민의힘 상임전국위, '비상상황' 의결
- 李측 반발 : 가처분 신청? "국바세" 청원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국민의힘이 위기입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와해시키기 위해,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기 위해 작은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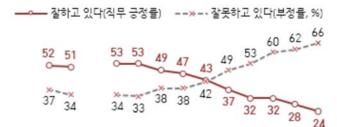
원칙을 회복하고, 당내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작성해주신 답변은 국민의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 용됩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을 보면서 느끼신 소감을 솔직하게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헤어질 결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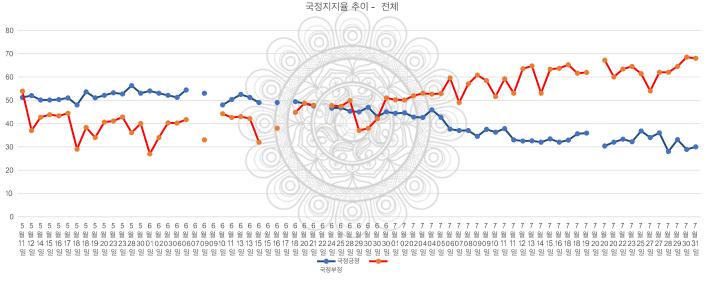
- "국민 10 명 중 7명은 대통령 국정수행에 부정적"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2022년, 최근 20주



4주 5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5주 1주 2주 3주 4주 1주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 2022년 3월 9일 당선, 5월 10일 취임. 5월 4주(지방선거 직전) 조사 쉼
- 매주 전국 성인 약 1,000명 전화조사.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06호 www.gallup.co.kr

취임이후 여론 흐름



취임 이후 7월 31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75개

5월 10일 ~ 7월 31일

- 대통령 직무긍정평가 최고 56.3% (5월 27~28일 조사) 최저 28.0% (7월 26~28일 조사)
- 대통령 직무부정평가 최저 36.1% (5월 30일~6월 1일 조사) 최고 68.0% (7월 30~31일 조사)
- 75개 여론조사 평균 42.3% v. 49.7%
-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평가는 <mark>하향</mark>, 부정평가는 <mark>상승세</mark>

취임 이후의 여론흐름

• 대통령 직무긍정평가

취임 후 3주까지 $50.8\% \rightarrow 51.8\% \rightarrow 54.7\%$ (최고점)

52.9% → 51.0% → 48.7%(대선 득표율과 비슷)

46.2% → 44.3% → 35.9%(40%선 붕괴)

33.5% → 32.9% → 31.7%(30%선 붕괴)

• 대통령 직무부정평가 평균 30% 후반~40% 후반, 취임 9주차까지 50% 밑에서 등락 반복취임 10 주차부터 평균 61.9% → 63.3% → 63.2%

윤석열 지지의 성격과 구조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최대 55%, 최소 30%'
- 50% 이상이라면 좋지만, 최소한 40%의 지지율 필요
- 대선의 승리연합을 지키고, 더 확대해야
- 올해 실시된 이념성향 조사는
 "보수 30% 초반, 중도 30% 초반, 진보 20% 중후반"
- 2021/12/31부터 2022/3/2까지 260개 여론조사 정권교체 지지 여론 평균 51.6%(대선 득표율 48.6%) → 보수의 마지노선 24%, 도로

윤석열 지지의 성격과 구조

- NO 콘크리트 지지층, "반사체적 성격"
- "정권교체의 도구" 인정이 '윤석열 정치와 권력'의 출발점

'윤석열 권력과 정치의 성공' = '<mark>윤석열의 긴장과 겸손</mark>'이 전제

대통령 긍정평가 이유 "모름 & 응답거절" 28% (갤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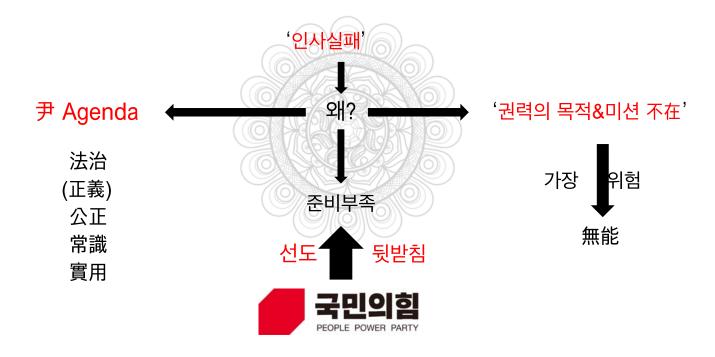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

- 지금의 권력은 겸손과 긴장을 스스로 버린 상황
- → 특별감찰관의 신속한 임명
- 광복절 경축사를 제2의 취임사로
- → 대통령 본인의 <mark>인식</mark>과 <mark>태도변화</mark>를 보여주는 연설
- 국정비전과제의 제시&인사
- 인적쇄신의 물꼬를 터야
- → '권력으로 무엇을 할 지 생각해 본 적 없는 권력은 실패 '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

- 권력의 코디네이터가 필요(권력의 역할분담)
- → 자기정치가 아닌, '윤석열 권력의 성공을 우선하는 사람들'
- 지금은 신뢰회복이냐 상실이냐의 기로
- → 사람들의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
- 지금은 <mark>우려에서 짜증</mark>으로 그리고 <mark>분노</mark>로 넘어가려는 민심

무엇을, 어떻게 할것인가?



정치적 사건

- 3/10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득표율 48.6%, 역대 최소(25만) 표차로 윤석열 당선
- 3/14 민주당 비대위, 윤호중 박지현 공동위원장 인선
- 3/17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60만 명대
- 3/21 문재인 대통령, '안보 공백, 일정 무리' 표명
- 3/24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박홍근 선출
- 3/28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과 청와대 만찬 회동
- 3/29 장애인단체, 요구사항 인수위에 전달·지하철 시위 잠정 중단
- 3/30 안철수 인수위원장, 국무총리직 고사

정치적 사건

- 4/6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360억 국무회의 의결
- 4/8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권성동 선출
- 4/12 민주당, '검수완박' 입법 당론 채택
- 4/15 더불어민주당,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발의
- 4/17 김오수 검찰총장 사의 표명
- 4/18 국민의힘 국민의당 공식 합당 선언
- 4/20 윤석열 당선인, '유퀴즈' 방송 출연
- 4/21 전장연, 지하철 시위 재개
- 4/22 여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검찰 수사권 중재안' 합의
- 4/27 국민의힘, '검찰청법 개정안' 저지 필리버스터
- 4/30 '수사권 축소'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적 사건

- 5/3 '검찰 별건수사 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文, 법안 공포
- 5/6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산
- 5/8 이재명·안철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 출마 선언
- 5/9 문재인 대통령 퇴임 연설
- 5/10 윤석열 대통령 취임 / 청와대 개방
- 5/12 더불어민주당 '성비위' 혐의 박완주 의원 제명, 지도부 대국민 사과
- 5/16 윤석열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
- 5/18 尹·국민의힘 당정 100여 명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 5/21 한미정상회담
- 5/23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 사퇴

정치적 사건

- 6/1 제8회 지방선거(투표율 50.9%) 광역단체장 선거 12 곳 여당 후보 당선
- 6/2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도부 총사퇴
- 6/7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우상호 의원 선임 / 화물연대 총파업 시작
- 김건희 여사 봉하마을 동행 ·팬클럽 등 비선 논란
- 환율 급등, 미국 금리 인상, KOSPI 2,500 붕괴 등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정 심화
- 6/17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착수
- 6/20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최강욱 의원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 6/21 행안부, 경찰국 신설 추진
- 6/27 윤석열 대통령, 나토 회의 참석차 출국

정치적 사건

- 7/6 국정원,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박지원·서훈 고발
- 尹 순방에 민간인 동행 논란
- 7/8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
- 7/11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대표 직무대행' 체제 추인
- 7/2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채용 관련 발언 사과
-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경선 후보 등록
-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여야 공방
- 7/23 경찰청, 전국 경찰서장 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 7/25 윤석열 대통령, '여가부 폐지안 조속 마련'
- 7/26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 / 현 정부 첫 대정부질문 시작
- 이상민 행안부장관 '쿠데타, 경찰대 불공정' 발언 논란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문자 메시지 노출 파문 / 이준석 대표 전국 순회 지속

발표

- 3/20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 용산 이전 기자회견
- 4/7 인수위, 정부 조직 개편 보류
- 4/14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1.25→ 1.5%)
- 4/17 복지부장관 후보 정호영, 의혹 관련 기자회견
- 4/28 인수위, '원전 비중 상향'
- 5/3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발표 / '병사 월급 200만 원' 등 일부 공약 후퇴 논란 점화
- 5/17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금융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선언
- 5/24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 6/21 상생 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등 부동산 대책 발표
- 7/6 국정원,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박지원 서훈 고발
- 7/13 백신 4차 접종 대상 확대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1.75→ 2.25%)
- 7/21 소득세 과표 조정, 가업승계 지원, 종부세 감면 등 세제개편안 발표

정책

- 3/22 尹, 손실보장 2차 추경 공식화
- 3/23 1주택자 보유세 전년 수준 유지, 60세 이상 종부세 납부유예
- 4/4 거리두기 '최대 10 인·영업시간 자정'으로 완화
- 4/18 마스크 제외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 5/2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 5/12 '소상공인 600~1,000만 원 손실보전금'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 5/29 62조 원 규모 2차 추경안 국회 통과
- 5/3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작
- 6/16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생애 첫 주택 LTV·대출한도 확대 등 경제정책방향발표

인선

- 3/13 尹,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안철수·부위원장 권영세·기획위원장 원희룡 등 인선 발표
- 3/16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 사퇴
- 3/24 文, 한국은행 총재 후보 이창용 지명
- 4/3 신임 국무총리 후보 한덕수 지명
- 4/10 국토부 원희룡 등 새 정부 8개 부처 장관 후보 발표
- 4/13 법무부 한동훈 등 추가 인선안 발표
- 5/26 복자 교육부 장관, 식약처장 인선
- 6/24 선관위, 김승희 '정치자금법 위반' 조사 착수
- 7/4 복지부장관 후보 김승희 자진 사퇴 / 윤석열 대통령, 교육부장관 박순애 임명

[발제 2]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과제(경제부문)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의장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과제 (경제부문)

강 성 진 정책위의장, 한반도선진화재단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01 현 정부가 직면한 국내외 복합 위기

1.1 글로벌 복합 위기

- 코로나 19와 글로벌 공급망 붕괴(Global Supply Chain) 붕괴와 유동성 확대
 - 노동자 이동 제한, 물류비용 상승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 에너지 가격 상승, 곡물가격 상승





-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기준 금리 인하, 재정지출 확대로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
 - 2022년 6원 전년 대비 상승률
 - * 미국: 9.1%로 41년 만 최대; 영국: 9.4%로 1982년 이후 40년 만 최대
 - * OECD 38개 회원국: 9.2%로 1998년 9월(9.3%) 이후 최대
 - * 유럽 에스토니아(22.0%), 라트비아(19.2%)

2

01 현 정부가 직면한 국내외 복합 위기

1.2 글로벌 복합 위기하의 한국경제

- 3고 현상: 고물가, 고환율(원화 가치 하락), 고금리
 - 고물가: 2022년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 6.1%(전년대비): 외환위기 이후 24년만에 최대
 - 고환율: 달러당 원화가 1300원을 넘는 경우가 지속됨
 - 고금리: 6월 13일 기준금리 2.25%로 0.50%p 인상 (한국은행 설립 이후 최대 인상)





- 글로벌 복합위기와 경제위기
 - S 공포 ->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동시 발생
 - R 공포 -> 경기침체 공포

3

01 현 정부가 직면한 국내외 복합 위기

1.3 한국경제 당면 과제

▋낮은 행복지표: 경제수준은 이미 선진국이나 국민의 행복수준은 그 이하

■ WHI(World Happiness Index): 149개국 중 62위(2020년 5.845로 0ECD 중 하위 그룹)

#실질GDP(14위/192개국) #1인당 실질GDP(28위/192개국) #SD Index (28위/165개국) #수출 세계 7위 #세계속의 한류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OECD),
#세계 최저 출산률

#사회양극화 #청년실업률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 경제발전 단계에 비해 높은 GDP 대비 가계 및 기업부채 비율,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부채(D1, D2) 규모, 낮아지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제도 중 시장(재화, 노동)의 후진성
- 중장기적 과제: 저출산·고령화, 연금 지속가능성,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제4차 산업혁명) 등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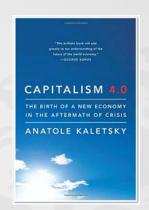








- 1. 윤석열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
- ❖ 보수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
 - (p.5) "과거 보수정부가 추구한 '더 큰 대한민국'과 진보정부가 추구한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동시에 추구
- ❖ 민간주도라면서 민간은 어디에 있는가?
- ❖ 자본주의 1.0 시대인가?
- ❖ 경제발전 패러다임 전환에 필요한 신성장동력 산업과 복지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방향은?



9

03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과제

- 2. 정부가 해야 할 시급한 개혁방안은 무엇인가?
- ❖ 규제개혁: 역동적 혁신성장 전략에 금융·세제지원 강화 포함되었으나 민간과 규제개혁은?
 - ■이념적 접근에 의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공공성 강조(교육·의료·관광 등), 서비스 공급자인 이해관계자에 의한 제4차 산업혁명 시기의 플랫폼 경제 발전(우버, 에어비엔비, 무인자동차 시범 등)
- ❖ 노동개혁: 글로벌 스탠더드 기준으로 경제발전 단계에 비해 뒤쳐지는 제도 개혁(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flex⋅security 확보)

10

- 3. 에너지 및 디지털 전환시대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창출?
- ❖ 디지털 및 에너지 전환시대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과 한국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산업 대책
 -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현실화: 규제완화, 이념적 접근 지양, 플랫폼 경제에 대한 대응 방안 등

11

03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과제

- 4.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 민간주도, 자유시장경제?
- ❖ 세제개편안(2022.7.22.):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단순화, 종부세 다주택 중과 폐지·세율 인하·공제 확대,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등. 2023년 기준 6조4000억원 포함하여 약 13조1000억원의 세수 감소 예상.
- ❖ 새출발기금: 9월 말까지 만기 연장·상환유예가 만료되더라도 대상 채무의 90∼95%를 연장해 주는 '주거래 금융기관 책임관리'나 대상이 아닌 차주에 대한 대출을 민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연장
- ❖ 폐업·부도 등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의 원금 탕감 정책. 그리고 청년층의 주식이나 코인에 대한 투자 실패 등에 의한 부채 부담 즉, '빚투족'에 대한 원금 상환유예와 이자 감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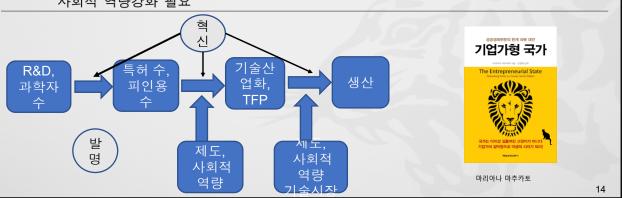
12

- 5. 장기적 과제로서의 주요 개혁? 윤석열 정부의 책임?
- ❖ 국민연금 개혁? 4대 보험 통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누구에 의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안철수 후보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서 실현은 어려운가?
- ❖ 공공부문 개혁? 교육개혁?

13

03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과제

- 6. 혁신성장을 통한 공급주도형 성장으로 국내외 복합 위기를 극복해야:
 - ❖ 단순 혁신이 아닌 혁신생태계(innovation ecosystem) 확립 필요
 -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이 혁신주도하고 정부는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 지향
 - 노동(노동생산성), 자본(투자), 기술(혁신) 차원에서 더 나아가 제도적 혁신을 통한 사회적 역량강화 필요



❖ 제도의 혁신 필요: WEF 국제경쟁력 부문별 순위(2019): 141개국 중 13위

분야/부문	순위	분야/부문	순위				
기본환경		시장					
제도	26	생산물시장	59				
인프라	6	노동시장	51				
ICT보급	1	금융시스템	18				
거시경제안정 성	1	시장규모	14				
인적자원		혁신생태계					
보건	8	기업활력	25				
기술	27	혁신역량	6				
TO MET THE THE COMM							

- ❖ 강력한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의 결과로 제도척 측면에서 보면 시장(재회사장, 노동시장)부문에 서 1인당 소득의 순위에 비해 매우 떨어진 현상 을 알 수 있음. 즉,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달성하 기 위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시장기능의 강 화를 우선적으로 해야 함을 알 수 있음.
- ❖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각종 제도의 순위를 보면 재화시장은 59위이고, 노동시장은 51위로 전제 순위에 비해 매우 떨어져 있음

15

03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과제

❖ 제도의 혁신 필요: WEF 국제경쟁력 부문별 순위(2019): 141개국 중 13위

WEF 생산물 시장 부문별 순위(2019)

항목	순위	항목	순위
조세 및 보조금의 경 쟁왜곡현황	61	관세율	91
독과점 수준	93	관세의 복잡성	83
서비스 업계의 경쟁	48	통관절차 효율성	25
무역장벽 존재 정도	77		

자료: WEF: 기획재정부(2019)

16

❖ 제도의 혁신 필요: WEF 국제경쟁력 부문별 순위(2019): 141개국 중 13위

WEF 노동 시장 부문별 순위(2019)

	항목	순위	항목	순위
	정리해고비용	116	외국인 노동자 고용 용이성	91
	고용 및 해고 관행	102	국내 노동력 이동성	83
\	노사관계 협력	130	전문 경영에 대한 신뢰도	25
	임금결정 유연성	84	급여 및 생산성	14
	적극적 노동정책	20	남성 대비 여성 임금 근로자 비중	59
	근로자의 권리	93	노동세율	55

자료: WEF; 기획재정부(2019)

17

04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4.1 자본주의는 대립과 갈등이 아닌 소통과 통합체제로!

【지속가능발전: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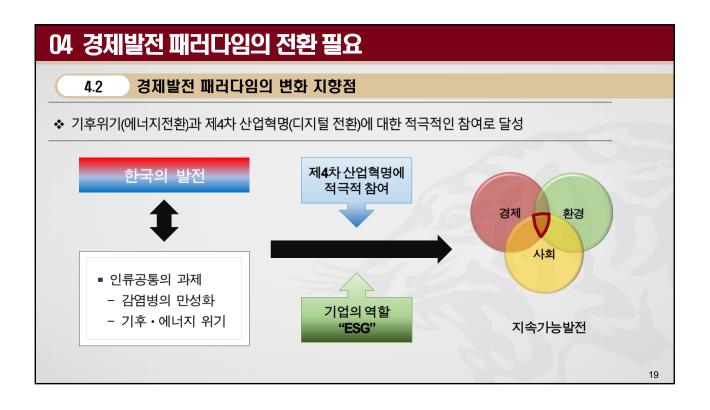
❖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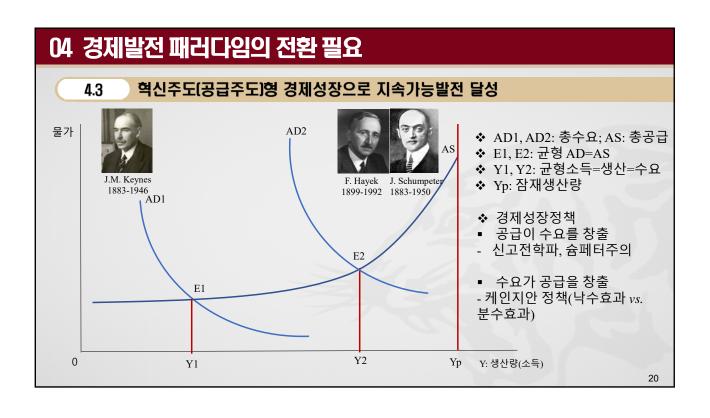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ED)

■EGS: 자본주의에서 기업의 역할 변화!

- ❖ 주주자본주의 → 이해관계자자본주의
 - M. Friedman -> BRT, World Economic Forum
 - ■이해관계자: 소비자, 종업원, 거래납품업체, 지역사회 등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과제 (외교·안보·통일분야)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열 정부 100일 평가와 과제: 외교·안보·통일분야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서언

- ○금년 8월 17일로 윤석열 정부가 정권 교체를 이룩한 지 100일을 맞 이하게 됨
- ○통상 정권 초기 100일 동안에는 조직 정비, 인력 배치, 정책 설계에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
 - 하지만 출범 100일의 기간은 임기 5년의 방향타 역할을 하기 때 문에 매우 중요
- ○분명한 것은 정권 초기 100일이 성공해야 향후 5년의 임기 동안 국 정의 동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각 분야에서 가시적인 정책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
 - 또한 추진하는 정책의 내용에 대해 국민의 충분한 이해,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음
-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본고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0일 간 외교·안보·통일분야에서 행한 일(성과 포함)을 정리하고 향후 추진해야할 정책과제를 제시
- Ⅱ. 외교분야 100일 평가와 과제
- 1. 추진 실적 및 성과

가. 대외정책 기조 천명: '가치외교' 및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책 임과 기여'

- ○취임 10일 만에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윤석열 대통 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인 권'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국정철학과 이를 수호하고 증진해야 한 다는 소신을 공유
 - 이는 국격에 걸맞은 '가치외교'를 추구하겠다는 것을 의미
 - ※2022년 5월 3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자유·평화·번 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국정목표를 제시하면서, 특히 외교분야에서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국정 과제 99번)' 및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 시아 외교 전개(국정과제 96번)를 제시
-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세계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 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책임과 기여를 다해 나가겠다 는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
-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 된 「NATO동맹국·파트너국정상회의(이하 NATO정상회의로 약칭)」 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를 강조
 - 이는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를 재확인한 것

나. 한미동맹 복원·강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북한 퍼스트', 종전선언, '사드 3불'¹) 등으로 약화 일로를 걸었던 한미동맹을 복원하는 데 최우선

적인 노력을 경주

- ○2022년 5월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지평을 전통 적 안보동맹은 물론, 가치동맹, 경제기술동맹(경제안보·반도체 동맹) 나아가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확대
 - 미래동맹 비전으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제시
 - 한미정상회담은 포괄적인 분야에 걸쳐 한미동맹의 협력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켜 나가는 계기로 작용

다. 신국제안보질서 형성에 능동적 참여 및 북핵문제 협력 당부

-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 및 지향목표에 걸맞게 NATO정상회의 에 참석, 신국제안보질서 수립·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
 -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나토 무대에 선 윤석열 대통령은 참 가국 정상들에게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
-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NATO는 2006년 글로벌 파트너 관계를 수립한 이래 정치·군사 분야의 안보협력을 발전시켜 왔고, 이제 대한민국이 역량을 갖춘 국가로서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경제안보, 사이버안보를 거론하며 "나토 동맹국과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
 - 이상은 대통령실 관계자의 마드리드 브리핑 내용
- ○한편, NATO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은 같은 날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3국이 당면한 안보현안을 집 중 논의

¹⁾ 사드(THAAD)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말하며,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서약한 '사드 3불'은 ▶한국이 사드 추가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말함.

- 이는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의 복원을 상징
 - ※ 미 백악관은 "이 정상회담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진화하는 위협을 비롯해 인 도-태평양 전반에서 세 나라 협력의 심화를 논의한 역사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

라. 공급망 다변화 등 경제안보외교 시동

- ○미국·유럽연합(EU) 등 작금 국제사회는 코로나 19 발발과 기후위기를 계기로 경제와 안보에 핵심적인 품목의 과도한 중국 의존도에 문제가 있음을 자각하고 탈중국화를 위한 공급망 재편·다변화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
- ○이런 국제적 추세에 맞게 윤석열 정부도 기회 있을 때마다 능동적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외교를 전개한다는 구상을 표명
 - 대통령 국가안보실 산하에 경제안보비서관을 신설하고 외교부에도 경제안보외교 담당 부서를 설치
- ○윤석열 정부는 구체적으로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참여, 원전 수출 및 소형모듈원자로 (SMR) 협력 확대, 미국 등과 우주 등 과학기술협력 확대, 지역·국가 별 맞춤형 방산 세일즈 외교 강화에 착수

마.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기반 조성

-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관계는 극도로 악화
 - 이는 양 국민 간의 감정 악화는 물론, 경제협력 및 인적 교류의

위축을 초래

- ○윤석열 정부는 모든 것을 과거사에 종속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근본 주의적 입장을 지양하고, 기본적으로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안보(북 한 핵·미사일 위협), 경제교류, 과거사, 영유권 갈등 등 현안문제를 이슈별로 대처한다는 입장
- ○NATO 정상회의 및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 등의 계기를 활용해 한 일 양국 간의 대화 재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
 - 윤석열 대통령은 전술한 6월 29일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기시 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
 - 윤석열 대통령은 주한 일본대사관에 마련된 빈소에서 조문, 장례 식에 국무총리를 파견

2. 향후 정책과제

- ○피할 수 없는 이웃이자 '애증의 관계'라 할 수 있는 한일관계는 윤석 열 정부 초기에 복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 다만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제의 강제동원 배상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해법의 발굴·제시가 요구
 - ※ 2015년의 「한일 위안부합의」 존중+일본 정부의 유감표명+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한국 대법원의 재심을 담아내는 새 로운 포괄적 합의 도출 필요
- ○또한 한·미·일 협력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대응을 넘어 광범위한 안보협력으로 확대하는 것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평화헌법"에 관한 논쟁 외에도 한일 과거사 문제, 한중관계 등과 관련되어 있는 매우 민감한 문제

- 따라서 우선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정상화하고 안보 분야의 인적 교류 및 정보 교류를 확대하면서, 대북한 억제력 강화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
- ○한미동맹 복원·강화, NATO와의 협력 확대는 한국 외교에 있어 중국 리스크의 관리라는 어려운 과제를 제기
 - 경제관계나 북한 문제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이 중국과 정면 대결구 도를 택하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할 것
- ○이와 관련해서 8월 22일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발전적·미래지 향적 한중관계 형성을 위한 능동적 이니셔티브를 발휘할 필요
 - 외교차관급 고위급 전략대화 또는 '2+2 고위급 외교·안보대화'의 정례화 추진 ⇒ 2008년 수립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격상 모색
 -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 영사협력 및 인적 교류를 확대하되, 반도 체동맹, 특히 '칩-4' 참여가 한중관계 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 국익과 실리에 기초하여 참여 범위를 결정하되, 단계적인 접근 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적극 당부할 필요
- ○이 밖에도 외교부는 7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 지역별로 특화된 협력 네트워크 구축 ▲ODA 및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 ▲글로 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등을 외교 분야 정책과제로 제시

Ⅲ. 국방·안보분야 100일 평가와 과제

1. 추진 실적 및 성과

가. 미국의 굳건한 대한(對韓) 방위공약 재확인

-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
 - 정상 차원에서 최초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수단으로써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 든 방어역량을 사용하겠다는 점을 천명
 - ※ 북한이 한국과 미 본토에 대한 핵공격 능력 증강 및 핵사용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고, 중국의 핵전력이 대미(對美) 핵보복 능력을 갖추게 됨에 따라 핵 방어를 제공하는 한미 간 '확장 억제' 공약은 시급한 과제로 대두
 - 미 전략자산의 적기 전개와 필요시 추가적 조치를 모색하는 구체 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
- ○또한 한미 양국은 2018년 이후에 중단된 한미 외교국방 차관간 협의(2+2 형태)로 진행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기 재가동하기로 합의
- ○이밖에도 그동안 중단, 축소된 연합훈련의 확대를 위한 협의를 개시 하고 우주, 사이버 등 첨단 국방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 가기로 확약

나. 한미연합훈련 정상화 착수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육해공에서 속속 한미연합훈련을 재개
 - 2022년 7월 11~14일 국내 임무공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미 공 군의 F-35A가 참여한 연합비행훈련을 시행

- ※ 미 공군의 F-35A가 한반도에 전개된 것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시험 발사 등으로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12월 이후 4년 7개월만의 일
- 7월 15~18일에는 강원도 인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12사단 상승향로봉여단과 28사단 독수리여단 4,300여 명, 그리고 한미연합사단 순환배치여단인 미1기갑여단 예하 2개 보병중대 300여 명이 참가한 과학화전투훈련(KCTC)을 실시
- 한미의 해병대는 7월 19~22일 포항 해병대 제1사단에서 유사시 항공전력을 활용해 전방으로 물자를 보급하는 상황을 가정한 연 합훈련(KMEP)을 실시

다. 한미 국방장관회담 개최 및 북핵 안보태세 업그레이드

- ○2022년 7월 29일(워싱턴 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은 연합 방위태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반 현안을 조율해 가기로 하고, 8 월 말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훈련을 통합・확대하기로 합의
 - 이번 한미연합훈련을 한국의 을지연습과 통합·확대하여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로 실시하기로 결정
 - ※ 이는 2017년까지 실시된 야외 기동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이 사실상 복원되는 것을 의미
 - '을지프리덤실드'의 경우, 국가총력전 개념으로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은 이번 훈련에서 전시체제 신속 전환과 함께 북한 공격 격퇴와 반격작전까지 전 과정을 숙달할 계획이라고 함
 - ※ 8월 1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방현안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을지프리덤실드'를 ① 위기관리연습, ② 1부 연습, ③ 2부 연습 등 총 3단계로 구분해 진행할 예정2)

^{2) 1}단계의 위기관리연습에서는 북한 도발 시 초기 대응과 한미 공동위기관리를 연습할 예

- ○또한 한미 국방장관은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와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 도 지역 전개를 포함한 동맹의 억제태세를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동맹의 억제력 향상과 한미 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위해 가까운 시 일 내(9월 중)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하기로 합의
 - 아울러 대규모 실기동 훈련도 2023년부터 재개하기로 하고, 확장 억제수단운용연습(TTX)도 더욱 강화해 실시하기로 합의
- ○이상과 같이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을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과 마찬가지로 보고 맞대응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북한 핵능력 고도화에 걸맞은 한미안보협력(특히 북핵 안보태세)의 업그레이드를 의미

2. 향후 정책과제

- ○당면하게는 적실성 있는 북핵 안보대책의 마련이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현안으로 대두
 -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구체화 및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한 대처가 가능한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이 사실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한반도 핵균형론」에 입각, NATO식 핵공유 방안을 한반도 상황에 맞게 변용하는 방안을 미국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 ◦보수-진보 정권 교체를 통해 계속 정책 혼선을 빚는 것이 '전시작전

정임. 이어지는 1부 연습에서는 전시 체제로의 전환과 북한 공격 격퇴 및 수도권 방어를 연습하며, 이 과정에서 범정부 차원의 국가 총력전 수행절차 연습도 병행함. 마지막의 2부 연습에서는 수도권 안전 확보를 위한 역공격과 함께 반격 작전 연습에 나선다고 함.

통제권(전작권) 전환'의 문제

- 윤석열 정부는 전작권은 '조건 충족시 전환'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등 상호 합의된 절차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
-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안보정책을 운용
- ○이와 관련, 국방부는 7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 위협 대응 '한국형 3축 체계'3) 확충 가속화 ▲'한국형 아이언돔4' 조기 전력화 ▲유·무인 복합체계 시범부대 본격 가동 ▲연대급 이상 연합야외기동훈련 재개 ▲'국방AI센터' 2024년까지 창설 ▲병영생활관을 2 내지 4인 기준실로 개선 등을 향후 국방·안보분야 정책과제로 제시
- ○이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 및 NATO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강구해 시행에 옮길 필요
 - 미 글로벌 공급망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첨단기술의 공동개발을 촉 진하기 위한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 추진
 - ※ 더불어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이 국내 방위산업에 미치는 경제 성과 산업 파급영향을 분석하고, 국내 방위산업 보호 방안을 마련

^{3) &#}x27;한국형 3축 체계'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고 응징·보복한다는 개념을 가리 킴..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해 선제 타격한다는 '킬 체인(Kill Chain)', 발사된 핵미사 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그리고 우리의 미사일로 상대 를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로 구성됨. 대량응징보복 계획에는 북한이 실제로 한국에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북한 전력과 함께 수뇌부를 미사일과 특수작전 등으로 타 격하는 참수작전(decapitation strike)이 포함됨.

⁴⁾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이 2011년 실전 배치한 미사일 방어체제를 가리킴. 이는 영토를 돔 (dome, 둥근 지붕)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는 방어시스템으로 레이더· 통제센터·미사일 발사대로 구성되어 있음. 약 70km 이내에서 적의 단거리 로켓포·박격포탄 등을 공중에서 격추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고, 최초 탐지에서 격추까지 걸리는 시간은 15~25초에 불과함.

- NATO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서는, 주요 국가와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 방산업무 전담 무관 파견을 통한 방산 수출 적 극 지원,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격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Ⅳ. 대북·통일분야 100일 평가와 과제

1. 추진실적 및 성과

가. 통일정책 청사진 발표

-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북한 바라기' 정책과 '대북 저자세'로 일관
 - 하지만 임기 말 대북정책의 결과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각종 도발·협박, 대화와 교류의 단절 등으로 나타났음
 - ※ 3차례 정상회담도 결국 '평화쇼'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
- ○이에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진' 과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통일비전으로 제시
 - 그리고 이를 위해 원칙(자유민주주의와 인권)에 입각하면서도 유 연하고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 구체적으로 북한이 요청하면 필요한 만큼 식량·보건·의료 지원을 실시하고
 - 또한 남북대화와 별개로 종교계 등 민간 교류 적극 권장하겠다는 입장
- ○이와 관련,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어달리기'의 입장에서 지난 정부가 성과를 낸 부분은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북한이 핵포기에 호응할 경우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 '담대한 계획'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제 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 점
 - ※ 이와 관련, 통일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제 지원뿐 아니라 북한의 안보 우려까지 고려', '선(先)비핵화 또는 빅딜식 해결이아닌 단계적·동시적 이행'이 주요 특징이라면서, '비핵화 정책의 진화와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을 강조
- 반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미·일·EU와 협력해 독자제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함
- ○이밖에 통일부는 7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 비핵화와 신뢰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인권 증진 및 분단 고통 해소, 민족동질성 회복, 내실 있는 통일준비의 5대핵심과제와, ▲인도적 협력 ▲그린데탕트 추진 ▲국민참여형 사회적 공감대 형성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 등을 세부 정책과제로 제시

나. 북한인권법 정상화

- ○윤석열 정부는 실용주의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보편적 가치 존중의 차원에서 '북한인권법'을 정상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현
-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7월 20일 이신화 고려대 교수를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약칭 북한인권대사)에 임명
 - 북한인권대사의 임명 근거는 북한인권법 제9조 제2항
 - 2016년 9월 이정훈 연세대 교수가 초대 북한인권대사로 임명돼 2017년 9월까지 1년 간 활동한 이후 지난 5년 동안 북한인권대 사직은 공석 상태

- ※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와 북한인권 거론 기피 태도에 기인
- ○북한인권대사의 임명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인권법의 정상화에 시동 을 걸었다는 것을 의미
 -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실은 7월 19일 북한인권재단(북한인권법 제10조) 출범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
 - ※ 이진복 정무수석은 7월 14일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북한인권재단을 빨리 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7월 25일 통일부는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 ○이상의 조치는 대북·통일정책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성을 보이는 대표적인 징표의 하나

다. 코로나 지원을 위한 대북 제안: 통지문 전달

-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코로나 지원 의사를 밝힌 가운데 권영세 통일 부 장관은 5월 16일 취임 직후 남북관계 재개를 위한 첫 신호탄으 로 코로나 방역 지원 의사를 표명
 - 이를 위한 실무논의를 위한 대북 통지문 전달을 타진
 - ※ 통지문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명의로 되어 있고, 수신은 북측 김영철 통일전선부 부장으로 명기
- ○남북한은 16일 오후 5시 남북연락사무소간 마감통화를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나 북측이 실무접촉 제안을 담은 대북 통지문 수령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음

○코로나 지원이 성사될 경우 남북 방역협력 등 남북관계 개선의 단초 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8월 11일 현재까지 북한은 호응하고 있지 않은 상태

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통일준비의 내실화

- ○'국민참여형 사회적 공감대 형성', 즉 '사회적 대화'의 확대 및 발전 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밝힌 대북정책 '이어달리기'의 대표적인 사 례
 - 문재인 정부는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2021년 6월 전문과 46개 문장으로 구성된 '통일국 민협약'과 권고문을 채택
-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시민참여 사회적 대화 플랫폼 외에 통일·대북 정책 전문가 대화 플랫폼을 개설해 통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 는 입장
 - 이를 위해 「통일비전시민회의」 및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 원」과 협력하며 사업을 진행 중
-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통 일준비를 할 것으로 예상

마. 기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발생한 탈북 선원 강제북송과 서 해상 우리 공무원 피격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재 발방지 보장 및 피해구제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시현 ○이는 불행한 과거사 정리 및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 차원에서 추진하 는 것으로 평가

2. 향후 정책과제

-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는 남북한 간에 깨어진 신뢰 회복과 남북대 화의 복원
-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백신·의약품 등 인도적 협력, 그린 데탕뜨(산 림·환경·수자원협력) 등 가능하고 필요한 분야부터 남북관계를 풀어 나간다는 기본입장 아래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탐색하고 적절한 시점에 대북 제안을 할 필요
 - 상기 사업 중에서 대북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를 선별해 북한 비핵화 전에라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
 - 필요시 미국 및 유엔 안보리와 긴밀하게 대화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
- ○더불어 윤석열 정부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이나 '개성만월대 공동 발굴'등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는 비핵화 전이라도 북한의 호응이 있으면 즉각 추진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 구축
 - 북한 방송개방도 민족동질성 회복의 차원에서 선제적 추진을 적극 검토
- ○'담대한 계획'의 구체화 및 적절한 시기에 대내외 발표를 착실하게 준비해야 할 것
 - 금년 광복절 77주년 기념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하는 방안도 고려

Ⅲ. 정책적 고려사항

- ○윤석열 정부는 외교·안보·통일정책은 대체로 잘 설계되어 있고 균형을 잡고 있음
 -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안보를 '대북 포용 일변도 정 책'의 비정상성을 제거하고 올바른 궤도 위에 올려 놓고 있는 것 으로 평가
- ○다만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입안·추진 시 한반도 상황의 이중성, 유동 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입체적이고 다층적인 측면을 아우르는 포괄 적·전략적인 정책이 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
 - 이 점에서 외교와 안보 정책을 현상유지에만 그치지 않고 통일지 향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긴요
-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유지는 안정적 국정운영의 필수조건이자 대 전제
 - 강경한 대북정책만 추진할 경우,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코리 아 리스크'만 키울 위험이 상존
 - 따라서 한미, 한중 간에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강온양면전 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
- ○이런 관점에서 북한의 코로나 방역위기에 인도적 협력·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고 '그린데탕뜨'를 추진하는 등의 접근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 물꼬를 트는 것이 현실적
 - 이와 관련, 적절한 시점에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과감한 접근도 적극 고려할 필요
- ㅇ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대북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될 것

- 목표: 단기적으로 북한의 변화(평화와 인권 증진, 개혁·개방), 최종 적으로는 평화적 통일
- 수단: 대화, 교류, 협력, 지원, 압박, 국제공조 등
-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안정화를 모색하되,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는 한편, 북한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항시 명심해야할 것
 - 이 같은 대북전략은 보편적 가치 및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정당 한 정책
 - 이와 관련, 북한인권 개선노력 동참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요 청을 끝까지 뿌리침으로써 국내외의 비난을 자초한 문재인 정부 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

윤석열 정부 100일의 평가와 과제 (경제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이성구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이사장

윤석열 정부 100일의 평가와 과제 (경제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이성구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이사장

일단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들 평가를 중심으로 본다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다. 부정평가가 훨씬 높기 때문이다. 더 구나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빠른 기간 내에 국정 운영 지지율이 30% 이하로 떨어진 부분은 그 원인을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경제정책 분야에서 본다면 다른 정권들의 출범 당시 상황과 비교해 윤 석열 정부가 특별히 심각한 잘못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경제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쉽고 미흡한 점을 수없이 지적할 수 있 겠지만, 각자 생각들도 다른데 그들의 조언을 잘 듣고 정책을 폈다고 해서 경제 분야의 정책수행 지지도가 올라갔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필자의 판단이지만 최악의 편가르기 정책으로 국민들을 괴롭힌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들어선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 분야에서 아직 국민들에게 이래서 새로운 정권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도록 공감할 만한 정책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듯하다.

물론 윤석열 정부 경제관료들의 면면을 보면 매우 안정적이고 검증된 인사들이다. 그런데 바로 거기까지라는 것이다. 만일 정치적 포용이나 인사 등의 면에서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면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렇게 추락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떤 면에서 경제정책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수행 지지율에서 중요한 평가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 갤럽의 7월4주차 국정수행 평가에서 부정평가의원인 가운데 인사문제가 21%로 가장 높긴 했지만, 무능, 자질부족

(8%)-경제민생 무관심(8%)-국고낭비, 복지, 부동산, 정책비전 부족 (4%) 등도 꼽고 있어 합계로는 정책 능력에 대한 불신이 20%로 인사문제만큼이나 부정평가의 중요원인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긍정평가를 한 그룹에서는 안정적(2%)-열심히 한다(4%)-변화, 쇄신(2%)-원전정책(2%)-유능함, 합리적(1%)-부동산정책(1%) 등으로 정책 관련분야가 합계로는 12%의 긍정평가 요인이 되고 있어 긍정평가원인은 4%에 불과한 인사문제처럼 지지율 추락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책분야도 상당한 정도로 부정평가를 받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오랜 공직경험과 경륜을 가진 안정적인 인사들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했는데도 정책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원인을 어 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편가르 기 정책으로 망가진 시스템을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도 합격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정책 분야에서조차 평균 이하 성적을 보인 까닭은 무엇일까?

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열심히 자유와 시장주의를 외쳤지만, 대통령 생각의 실질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정확하지 않고 내각에도 대통령의 비전을 수용하고 구체화할 용기와 능력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후보 시절 전두환 대통령이 능력있는 인재들을 쓴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능력 있는 인재를 알아보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전 대통령이 집권 초 경제정책 지휘자로 발탁한 김재익 경제수석은 안정되고 검증된 경력을 가진 인사는 아니었다. 정통 공무원 출신도 아니고 직급도국장으로 장차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정책의 틀을 전환할 만한능력과 용기를 가진 인재를 발탁하고자 한다면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정책을 운영했다는 경험은 오히려 부적격일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경제정책을 전환한다고 하지만 현재 정책의 내용들은 왜곡된 정책의 틀을 바꾸는 것이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문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본 계층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 - 예컨대 세 부담의 부분적 완화, 선심성 정책의 부분적 축소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매우 안전하고 큰 무리 없이 진행하는 방법이겠지만,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작업들은 전폭적인 국민적인 지지 없이는 추진될 수도 없다. 오히려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획기적 정책 전환을 내세워 야당이 반대할 수 없게 하면서 국정을 이끄는 역량을 보이거나, 야당 반대로 실패할 경우 더 큰 국정 운영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정책비전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정책의 내용들은 마치 다수당이 몸조심하는 듯한 인상을 보인다.

대통령 자신도 취임사에서의 자유시장주의 외침과는 달리 앞뒤를 재는 신중한 정치가로서의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비전의결여로 인식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화물연대나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신중한 접근으로 비교적 원만한 해결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정부의 철학이 무엇인지는 의문으로 남았고, 주당 근로시간 제한, 최저임금제 문제 등에서도 마찬였다. 비단 근로 문제만이 아니라 코로나피해보상 지원, 서민층 채무경감, 부동산 종부세 완화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안정적이고 점진적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만 적어도새 정부의 탄생에 걸었던 국민적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낮게 평가될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지지율 추락과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를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 기준금리의 급속한 인상으로 서민층을 비롯한 기업 부담도 가중되었지만 그 자체를 가지고 정책 실패로 비난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은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미중갈등 심화에 따른 한국경제의 선택 문제나 시장주의 원칙을 관철할 규제개혁 추진에서 현 정부의 국정수행능력을 평가하기에는 아직좀 이른 감이 있다. 다만, 우선 미.중관계의 선택에서 한미동맹 수복이나 대중 경제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모호성 견지라는 정도로 문제가 해결될 안이한 상황이 아니고, 이미 우리 경제는 어느 한 진영에 일방적으로 의존한 성장 지속은 어려운 단계에 와 있는 만큼, 우리 능력으로미국과 중국에 대해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 방법으로 상호 이익을도모하는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규제개혁도 그저 일자리 만들고 경제살리기 위한 것으로 밀어붙이면 그로 인해 손해 보는 집단이나 야당을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책 실패는 예고된 것과 같다. 규제개혁이기업,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공감을 얻는 과제가 되도록 설득할비전과 역량, 전략을 가진 인재를 활용할 수 있어야 대통령 본인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자유주의가 공허한 말에 그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 100일 평가와 과제 (행정·정책 분야)

김성준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윤석열 정부 100일 평가와 과제: 행정·정책 분야

김성준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프롤로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지났다. 윤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그동안 비대해진 정부규모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합리적인 통폐합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등의 다양한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시장경제를 추구하겠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정책의 방향을 민간 중심의 시장원리에 따른 국가발전에 두고 있다. 과거 정부주도의 각종 산업정책의 변화와 규제개혁이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들과 정책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따지고 보면 시장의 오류를 치유하겠다며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고, 시민의 개인적인 결정과 일상까지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간섭한 정부실패에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윤석열 정부의 문제 진단과 개혁의 방향은 옳은 길로 향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서는 5년간 윤석열호의 항해에 처음 떠나는 지난 100일 동안의 모습을 행정·정책의 측면에서 평가하고 앞으로 마주하게 될 험난한 항 해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관리 측면과 정책 측면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행정/정책 분야 100일 평가와 과제

행정조직개편과 과제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우선 국정이념과 비전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추진체계로서 조직을 개편한다. 따라서 조직개편은 정부가 추진할 정책의 주체를 새롭게 구성하고 정부조직의 기본적인 체계를 정비한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새 정부에서 눈에 띄는 조직 변화는 대통령실의 개편이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그동안 미국, 영국, 일본 등과는 달리 철저하게 격리되어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군림하던 청와대를 60여 년 만에 국민들에게 개방한 것은 조직개편을 넘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행정조직관점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기존 청와대 시절의 3실 8수석 체제에서 민정수석을 폐지하는 등 2실(비서실, 국가안보실) 5수석(정무, 시민사회, 홍보, 경제, 사회)으로 개편하며 대통령실의 축소를 단행했다. 비록 일부 기존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작은 정부를 천명한 새 정부가 대통령실부터 손을 봤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대통령 대선 공약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의 하나인 여성가족부 (이하 여가부) 폐지 문제는 제대로 추진되지도 못하고 아직까지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기존의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과 가족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등의 계획을 표방했으나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여전히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향후 어떻게 개편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조직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부정책의 대응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도식적이고 물리적인 조직개편으로는 어떤 의미도,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설령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를 기조로 삼고 있다 하더라도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직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마땅하지만 반대로 필요한 조직을 신설하는데 부담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경제정책의 핵심인 규제개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설픈 위원회나 임시조직이 아닌 상설조직을 만들고 이에 따른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정부조직개편은 개편 그 자체에 방점을 두기보다 기존의 칸막이 행정을 허물고 부처 간의 협업을 활성화하고 책임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해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

정책추진과 과제

정부정책은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결정하고 수행하는 일련의 행동방침이다. 이렇듯 정책은 문제해결이라는 목적지향성을 가지고있다. 동시에 공공정책은 공식적, 비공식적 참여자들의 정치과정을 통해 생겨가는 산물이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성을 띄고 있다. 때문에 어떤 정부가 어떤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느냐가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정책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고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정 책과정'을 통해 추진된다. 첫 단계는 정부의제가 설정되는 것이다. 세 상의 모든 문제들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해야할 의제가 되지 않는 다. 정부의제는 특정 사회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이를 정부가 개 입해서 해결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해당 문제가 반드시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것인지 규범적으로 질문하고, 또 실제로 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경험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야 한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의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시장참여자 들의 자발적인 의사결정과 거래를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정부가 함부로 시장에 개입해서는 가격왜곡 등 시 장을 교란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고 만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 패는 대표적인 본보기이다.

이렇게 정부의제가 설정이 되고 나면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정책은 본질적으로수혜자와 비수혜자를 낳는 정치적 과정이기 때문에 정부정책은 '원칙(principle)'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일부 소수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절대 다수가 희생하는 정책은 원칙이 아니라 이해관계(interest)에따라 만들어진 결과이다. 택시업계를 비롯한 소수의 이익 때문에 보다편리하고 다양한 교통수단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일반시민들의 희생을 강요한 '타다금지법'과 같은 것이 전형적인 사례다. 이렇듯 정책참여자들의 상호작용과 정책을 둘러싼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정책형성의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정부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최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살에서 5살로 낮추는 교육부의 학제 개편안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를 비롯한 이해 관계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권성향의 교육감들의 저항으로 사실상 백지화의 길로 가는 모습이다. 사실 학제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정부의제로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도 뚜렷이 없는 상태로 갑자기 튀어나온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정책과정이 무시

된 결과이다. 불행하게도 이렇게 교육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면 단순하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권초기의 정책실책은 앞으로 추 진해야 할 정부의 중대한 정책추진에 막대한 부담을 주게 된다는 점이 더욱 심각한 것이다.

정부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단순히 정책의 합리성과 타당성 확보만으로 좌우되지 않는다. 정책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다. 흔히 '졸속행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름 아니라 정책과정의 기본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어설프고 조급하게 추진되는 모습을 비꼰 말이다. '조금 늦어도 일관성을 가지고 확실하게(slow but steady)'라는 말은 어느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모든 정책의 추진에 적용되는 격언이다.

에필로그

린드블롬(Charles E. Lindblom)은 정책결정을 '점증주의'라고 했다. 한마디로 정부정책은 기존의 관례와 정책을 바탕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점진적 방식으로 결정된다는 뜻이다. 그의 이론은 행정과 정책을 매우 현실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점증주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행정과 정책에 대해 급격한 변화를 의미하는 '혁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과거 정부에서 제시한 정부혁신은 그래서 '허구'에가깝다. 안타깝게도 정부는 현실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오직 점진적인 개선·개혁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아무리 여론의 압박이 거세다 할지라도 정책추진에 있어 정부는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 조급증을 버리기 위해서는 원칙에 의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선한 의도로 공익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국민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는 생각은 완벽한 착각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 이해관계에 얽힌 정책, 감정적인 여론에 휘

둘리는 정책으로 어정쩡한 모습을 지양하는 유일한 대안은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자유민주주의의 원칙과 시장경제의 원칙을 점검하고 원칙을 통해 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토론 3]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그 100일 전을 돌아본 후

강영환 대전도시전략연구원장 (전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

윤석열정부출범100일, 그 100일 전을 돌아본 후.

강영환 전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

1. 국민은 왜 윤석열정부였는가?

윤석열정부는 시대상황 속에 낡은 정치의 교체, 헌법정신에 근간한 국가정체 성 확립. 역대 정부를 뛰어넘는 새로운 국정 열망으로 국민이 만든 정부

- O 공정과 상식의 시대정신 속에 국가 정상화의 국민 열망을 부여받아 정치인 이 아닌 국민의 대표로 소환, 정권교체의 소임을 일군 대통령
 - ⇒ 非정치인 출신으로 기존의 낡은 국정운영질서를 새롭게 전환
- O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 편에 기울지 않은 균형 잡힌 국정운영 등 국가 기본질서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 ⇒ 헌법정신에 근간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 재확립
- 역대 정부의 공과, 특히 문재인정부 5년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객관적으로 수렴하여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정 방향성 기대
 - ⇒ 윤석열만의 윤석열다운 국가미래비전과 국정운영방향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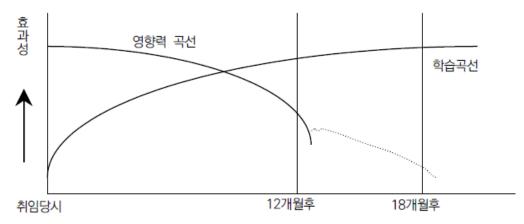
2. 어떤 문제가 있으리라 예상했었는가?

문재인정부 5년간 쌓인 사회적 갈등, 국민불신, 정부역할부재 등 많은 문제에 더해 국내외 도전과 시대적 요구로 윤석열정부 앞엔 더 큰 과제가 놓일 것이라 예상

- 국회 민주당 장악으로 새 정부와 갈등이 더욱 첨예할 것으로 예상. 이준석체제 회의론 등으로 당·청 관계 역시 불확실한 상황
 - ⇒ 대통령의 통치리더십, 추진력과 국정조정능력의 등 운영의 묘가 매우 중요

- O 문재인정부 임기말 높은 지지도(40%대)와 정권교체 높은 열망(55%전후) 의 모순은 역대 최대의 진영 선거를 야기
 - ⇒ 문빠, 팬덤정치 등으로 지나친 진영논리와 갈라치기에 의한 **진영대결 구조** 이어질 가능성. 이의 혁파 및 화합 노력 필요
- O 좌경화정책, 내로남불, 이권카르텔 등 문재인정부의 非도덕적 행태에 대한 국민적 비난과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욕구 팽배
 - ⇒ 국민 불신 심화 원인인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파괴의 근본적 처방 필요
- O 문재인정부는 전반기는 적폐수사와 좌경화시책, 후반부는 코로나대처에 편 중, 역량 올인. 이로 인해 국정 제반의 다양한 과제추진과 운영엔 소홀
 - ⇒ 코로나 현안 外 외교,안보,경제,법치,문화,환경 등 제반의 정상화 노력 필요
- O 4차산업혁명 등 새로운 전환의 시대 상황 속에 2030의 정치적 성장, 젠 더갈등 등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함께 사회적 문제 또한 대두
 - ⇒ 젊은 층이 참여하고, 사회와 산업의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정책 준비
- O 대선을 거치며 인기영합적 공약이 경쟁적으로 제기된 상황. 특히 청년, 부동산, 지역발전 등 표와 직결된 분야의 공약에 집중. 이의 정책적 판단 필요
 - ⇒ '할 수 있는 것을 한다(Do the Doable)'원칙하에 면밀한 공약 재검토 필요
- 후보공약으로 청와대개혁을 담은 '광화문시대'와 여가부폐지, 민간합동위원 회 등 정부조직변화를 수반하는 상징적 정책공약에 대한 반론 잔존
 - ⇒ 헌법 틀안에서 권력개혁을 골자로 **윤석열표 정치개혁 밑그림** 확실한 제시
- 3. 향후 1년이 윤석열정부 성패를 좌우한다
 - O 취임 1년은 윤석열정부 5년을 규정. 향후 정국운영기조에 절대 영향
 - ☞ 임기제 대통령의 영향력은 임기 1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감소하는 반면,시간이 흐를수록 학습효과로 인해 국정운영 경험은 증가한다는 것이 이론적 정설

- 즉, 대통령(당선인)의 국정장악력과 국정운영 경험은 시간을 기준으로 반 비례하는 경향이 있음
- ☞ 미국 대통령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학습이 시기가 지남에 따라 증가하지만 대통령의 영향력은 12개월을 기점으로 하여 쇠퇴함을 보여줌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영향력 및 학습력 변화 추이>

출처 : Walker, W. E. & Reopel, M. R. (1986) Strategis for governance: Transitions and domestic policymaking in the Reagan Administration

- O 인수위기간과 취임100일을 돌아보며 5년간 국정비전과 목표, 성과와 아쉬운 점을 돌아보며, 향후 1년간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큰 그림과 핵심정책의 맹아를 보여줄 필요
 - ⇒ 특히 선거공약 등을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재평가하여 **주제별, 부처별로** 목록화하고, 이를 근거로 새 정부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 및 집행
- 4. 윤석열 정부 향후 1년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 O 윤석열 정부는 통치철학의 초심과 시대 상황에 맞춰 운영 기조를 재확인
 - ⇒ 헌법정신에 따른 청와대정부 혁파 의지 따라 **<권력개혁 정부>**
 - ⇒ 99개가 달라도 1개가 같으면 함께 한다는 정신에 따라 <국민통합 정부>
 - ⇒ 진영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삶에 도움을 우선 생각하는 <실사구시 정부>

- ⇒ 전임 정부와 여당, 언론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한 **<협치와 소통 정부>**
- ⇒ 어려운 문제의 해결에 직접 나서는 <책임감 높은 정부>
- O 아울러 대통령의 PI (President Identity)가 제대로 부각되도록 대통령 행보에도 반영
 - ⇒ 윤석열다운 통치철학 ·개혁과제가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대통령이 주도
 - ⇒ 전문가에 맡기는 믿음의 리더십(시스템정부 구현)
 - ⇒ 국민을 받들되 법과 원칙을 지키는 PI
 - ⇒ 혼밥 먹지 않으며 지속해서 국민, 정치인, 언론과 소통하는 PI